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84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Vol.84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7월 2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이종민, 방보람, 김효정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68
이메일	brba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Vol.84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산업부·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정·시행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시행

10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고시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서울특별시,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수립
대구광역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2022~2026)' 수립·시행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공원 특례사업 이주대책' 마련
충청남도,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 도민 의견 수렴

18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방문객 편의시설 대폭 확충하여, 용산공원 10일간 시범개방
국토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기반시설 지원
국토부, 2022년 '고령자복지주택' 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 선정
국토부,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행안부, 우수마을기업 16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9곳 선정

행안부, 2022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
 행안부, '2022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59개 지자체 선정
 행안부, 지역맞춤형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에 6개 지자체 최종 선정
 서울특별시, 보육의 공공성 높인 '서울형어린이집' 100개소 추가 확대
 부산광역시, 국제스마트도시 평가 1년 만에 35단계 상승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그린 뉴딜 사업 확대 추진
 강원도, 2023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
 전라남도, 전남형 청년마을 순천, 곡성, 영광, 완도 등 5개소 선정
 경상북도 영주시,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개장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4개소 본격 착수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개 모집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35

과기부·국토부·산업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 실시
 행안부, 과학적인 폭염대응을 위한 전국 지자체 '열분포도' 제공
 대구광역시, '스마트 공유공간 시스템 지원사업' 공개모집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2년 6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2.06.10.

건축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이다. 그동안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 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의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자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되는 비재무적 요소

아울러,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의 주요 개정안

구 분	주요 내용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 마련	- 민간기관에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협의 후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를 신설
전산자료 이용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 실효성 없는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이용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자료 이용이 용이하도록 개선

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2.06.27.

건축
정책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6.21)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 ② 기본형건축비 비정지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구 분	주요 내용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 (개정·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 *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정함 				
기본형건축비 비정지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개정안)	<table border="1"> <tr> <th>현 행</th><th>개 선</th></tr> <tr> <td>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td><td>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td></tr> </table>	현 행	개 선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현 행	개 선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국토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철도운영과. 2022.06.28.

국토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희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희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의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주민편의 등으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유희부지 활용사례]



산업부·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2022.06.14.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2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①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사항: '22.2.3. 공포(22.8.4. 시행)

*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초광역권 발전 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절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균형위 심의·의결 거쳐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배포 -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수립지침에 따라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광역권발전계획 심의·의결(법 제22조)
초광역협력 사업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 지원 가능 * 중앙부처-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 협약

②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 관련 사항: '21.12.21. 공포(22.6.22. 시행)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 관련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결정 절차) 시·도지사 의견청취 → 입지계획안 국토부 협의 → 입지계획안 균형위 심의·의결 - (제출서류) 설립목적, 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정원/예산 등 기관의 규모, 희망 입지 및 사유, 시·도지사의 의견 - (균형위 심의 시 고려사항) 지역의 여건과 특성, 신설공공기관의 기능 등 - (기타) 매년 입지결정 심의요청 계획 제출(중앙행정기관 → 국토부) 등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과. 2022.06.17.

국토
정책

환경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안

구 분	주요 내용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유어장(游漁場) 설치 절차 간소화	-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하여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어촌·어항시설 규제개선	-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반시설 설치 확대	-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과태료 정비	- 위반행위 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 상한액에 맞추어 정비한다.
기타 개선사항	- 이밖에 ‘해안’ 및 ‘섬’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특별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정·시행

전략사업과. 2022.06.07.

건축
정책

주택
정책

서울특별시의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5.11.)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 개정 법 시행(8.4.)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 중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①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②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③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이다.

먼저,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13층(최고층수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최고 15층으로 되어있는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변경 전

구분	기준	임대주택 건설비율				비 고
		구분	10% (공공)	~	20% (공공,공 공지원)	
2종	200% 7층 또는 평균 7층 (區 심의)	용적률	225%	직선 보간	25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시 평균층수 완화 (구릉지) 평균10층, 최고13층: 공공기여 5% (평지) 평균13층, 최고15층: 공공기여 10%
		층 수	최고 15층			
2종 (7층)		용적률	225%	직선 보간	250%	
		층 수	최고 10층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변경 후

구분	기준	임대주택 건설비율				비 고
		구분	10% (공공)	~	20% (공공·공 공지원)	
2종	200% 7층 또는 평균 7층 (區 심의)	용적률	225%	직선 보간	250%	삭제
		층 수	최고 15층			
2종 (7층)		용적률	225%	직선 보간	250%	
		층 수	평균 13층 (최고층수 15층 이하)			

다음으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 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으며, 모아타운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반영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모아주택 관리계획 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절차]

구분	주요내용					
제안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 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 					
세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적정범위에 대해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수립 범위를 확정해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 수립범위 협의	⇒	전문가 사전자문 요청	⇒	전문가 사전자문	⇒
	주민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참석)	
		⇒	자문결과 통보	⇒	계획수립 적정범위 안내	⇒
			자치구 → 자치구		자치구 → 주민	
					관리계획 수립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마련되면 제안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치구에 관리계획안 제출 						
	관리계획 수립	⇒	전문가 사전자문	⇒	관리계획 승인 신청	⇒
	자치구 ·공사 등		시·구합동		자치구 → 서울시	
		⇒	주민공람 (14일간)	⇒	통합심의	⇒
			서울시		서울시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서울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시행

전략사업과. 2022.06.30.

건축
정책

주택
정책

서울특별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특히,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개발 여력이 큰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우수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도 확대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 주거지역뿐 아니라 주거 기능이 밀집(공장비율 10% 미만)한 준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특별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운영기준 전반을 손질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고시

철도운영안전과. 2022.06.20.

건축
정책

국토
정책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영을 관리·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 통제, 복구 지시 등을 수행하면서 철도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는 '06년 구축된 이후 16년 이상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된 상태이다.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영 중단될 경우 전국의 열차 운행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의 노후화 및 운영 중단, 지속적인 국가철도망 확장 등에 대비하면서 중단 없는 철도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년부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단 없는 철도관제를 위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복수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관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충북 청주시 오송 국가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3,366억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업무동 및 숙소동을 건설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철도관제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올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설계 및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2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신공항기획과. 2022.06.29.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6월 30일 수립·고시하고, '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하여,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그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였다. 이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이 6월 22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되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 8,077억 원이 투입되어 활주로(2,5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되며,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다.
- 2058년 기준 연간 여객수요는 105만명, 화물수요는 8천톤으로, 제주 등 국내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해져, 새만금 지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군공항인 군산공항 서쪽으로 1.35km 이격된 위치에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공항으로 건설되며, 개항에 맞추어 군산공항에서 운영중인 민항노선을 이전한 후 군산공항에 남게 되는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공개발기획단. 2022.06.30.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서울특별시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주간 주민 열람공고(7.1.~7.14.)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간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혁신축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한강대교 남단(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원) 약 17만㎡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과, 대규모 유희부지인 옛 노량진수산물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는 여의도, 용산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입지적 장점에도 철도와 도로로 단절돼 있어 오랜 시간 고립되고, 토지 활용도도 낮은 상황이다. 수산물시장 이전 이후 남은 옛 수산물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 등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특별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옛 노량진수산물시장 부지 민간개발과 연계해 노량진 일대를 경제활동과 주거, 문화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지상철도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량진역’은 철도 상부에 데크를 깔고 주거, 상업, 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입체적·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의도~노량진을 직접 연결하는 차량·보행 기반시설도 새롭게 구축한다.

또한, 노량진 수산물시장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통해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기 하기 위한 수변 활성화 전략도 담았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등 편의시설과 수변문화복합시설, 노량진만의 특색을 담은 워터프론트 같은 한강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교육협력과. 2022.06.27.

건축
정책

문화
관광

부산광역시는 27일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15분 도시 생활권 내 어린이와 부모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주 이용 대상인 어린이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시설 디자인의 통일성을 확보해 부산만의 브랜드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거점시설의 이해 ▲상위계획 및 의견수렴, 유사사례 ▲공간구성 원리 ▲기본 방향 및 공간 디자인 ▲공통 디자인 요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통디자인으로는 마감재, 색채, 채광, 사인디자인 등을 제안했다. 전체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을 고려했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마감재와 문·창호 등의 디자인을 담았다.

또한, 어린이들의 정서적·인지적 발달을 고려하고 자연색 계열의 밝은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색채와 채광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의 디자인 방향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15분 도시 생활권 내 어린이와 부모가 집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디지털 세대의 흥미와 미래기술을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가족과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어상용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시설 내 영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콘텐츠로 아이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하고, 코딩교육 등 디지털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수립

도로계획과. 2022.0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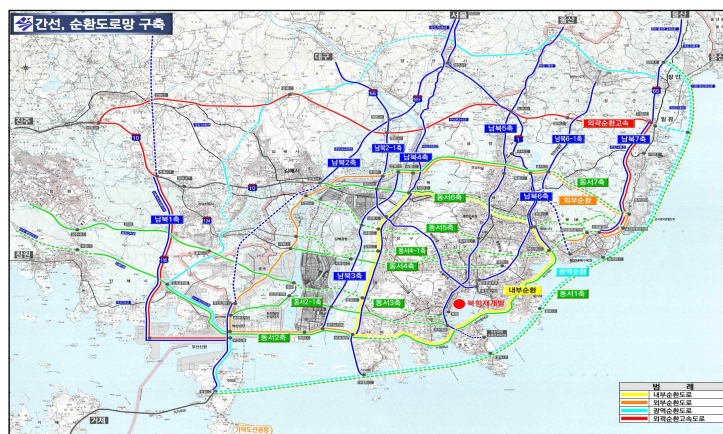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는 부산시의 최상위 도로계획인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2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부산광역시의 직전 계획은 지난 2017년 12월에 고시된 바 있다.

이 계획은 도시·지역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과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도로 건설·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수립된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은 「글로벌 메가시티 친환경 스마트 미래도로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도로건설 및 관리 계획 ▲시민중심의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도로 구현 등을 4대 목표로 설정해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로 구현에 중점을 뒀다. 계획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장기 도로망 구축을 위한 최종 목표연도는 2040년이다.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주요도로망]

대구광역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2022~2026)' 수립·시행

토지정보과. 2022.06.26.



대구광역시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2022~2026) 주소 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96년 시작한 도로명주소는 '06년 도로명주소법 제정을 통해 생활화를 견인하기 시작했으며 '14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하게 됐다.

현재까지 대구광역시는 도로명 4,200건, 건물번호 80,000건, 상세주소 15,140건, 국가지점번호 811건, 사물주소 6,352 등 약 11만 건의 도로명주소 부여와 주소시설물 설치를 추진했다.

향후 5년간 대구시가 추진할 주소정책의 방향은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하는 기존의 주소개념이 아닌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시키고 주소표시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연결해 시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소참조체계(도로명, 실내 이동 경로, 격자, 구역), 국가주소정보[도로명주소, 사물주소(버스정류장 등 35종), 공간주소(도로변 기초번호, 산악등 지점번호)], 주소지능정보(국가주소정보 + 서비스 인프라 정보)

집행계획에 따라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등) 및 건물 실내 이동경로(승강기, 계단, 복도 등)의 주소정보를 추가 구축하고, 사물(소화전 등), 공간(공터) 등에도 주소정보를 도입해 주소표시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에 시간 정보가 포함된 사물주소 부여로 전기차 충전 잔여 시간 정보 공유 및 충전이 빠른 구역으로 안내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생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문화공원 특례사업 이주대책' 마련

공원녹지과. 2022.06.17.



대전광역시는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원주민 거주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요구 등 이주대책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문화문화공원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대다수가 국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광역시와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주)(대표: 윤경수)는 상급기관 질의 및 법률검토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이번 이주대책계획 수립으로 원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 공원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 도민 의견 수렴

기후환경정책과. 2022.06.14.

국토
정책

환경

충청남도가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립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에 도민 목소리를 담는다.

충청남도는 오는 24일까지 2주간 충청남도 누리집에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초안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글의 만사형통 의견 수렴 바로 가기(링크)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흡수원 ▲이행 기반 등 8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초안은 도와 시군, 탄소중립위원회가 함께 검토·보완한 것으로, 이번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개선하고 다시 한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본 계획은 내년 3월 수립 예정인 국가 기본계획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공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국토부, 방문객 편의시설 대폭 확충하여, 용산공원 10일간 시범개방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2022.06.03.

환경

문화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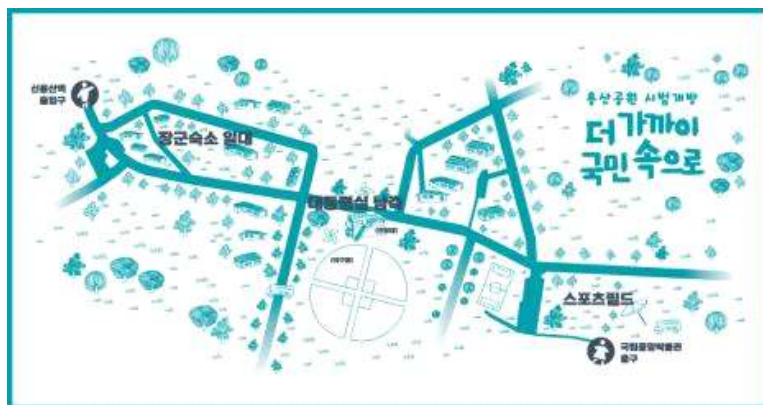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개방은 당초 5월 25일부터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120여 년 만에 문을 여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자 그늘막, 벤치, 식음료 등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하여 국민을 맞이하게 되었다.

시범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하여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km의 대규모 공간이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개방하는 부지는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며, 4가지 주제*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 4가지 주제는 국민의 첫걸음을 맞이하는 군악대·의장대의 환영식을 볼 수 있는 '①국민이 열다',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②국민과 걷다',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③국민과 만나다', 드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모습을 채워가는 '④국민이 만들다' 등이다.



[용산공원 시범개방 주요구역]

국토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기반시설 지원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6.06.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난개발 방지에 유리한 제도로써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원과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21년 4월·11월)하여 관리계획 수립(기초지자체)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광역지자체)될 경우 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확산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 서울 14곳, 경기 7곳, 인천 2곳, 기타 6곳(참고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현황)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및 공동이용시설(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 시설) 8종에 대하여 지원

현재 후보지 29곳 중 광명시·동두천시를 포함하여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2022년 ‘고령자복지주택’ 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 선정

공공주택정책과. 2022.06.07.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재정지원) 임대주택 : 건설비의 80%(출자 39%, 융자 41%), 지원단가 885만원/3.3㎡
사회복지시설 : 개소당 건설비 27.3억원 지원

** 약속02-국정과제10 ‘충족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에 포함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24~43%)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하였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22년 1차 고령자복지주택 선정지구 계획(안)]

지자체	고령화율 (%)	임대주택 (호)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안)	
			면적(㎡)	주요 시설
경북 경주시	24	120	1,500	텃밭, 시니어카페, 건강관리실 등
경북 의성군	43	60	1,574	체력건강증진실, 상담실, 취미 등 프로그램실 등
전북 장수군	36	80	1,200	경로식당, 헬스케어시설, 옥상텃밭 등

국토부,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도시경제과. 2022.06.28.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한 '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를 6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

인증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인증과 스마트 서비스인증으로 구분된다. 스마트 도시인증은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①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 ②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③스마트도시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평가요소이다.

서비스 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①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②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③지역 도입·확산이 용이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이 분야별로 기능·특성·규모 등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금껏 확산성과가 가장 높은 교통분야 서비스(전체 서비스의 약 44%)에 대한 인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였으며, '21년 모의인증을 거쳐 올해 교통분야 서비스 본인증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스마트서비스 인증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올해는 환경분야 서비스에 대한 모의인증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비스 인증제 운영기관) 주관으로 추진된다.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에 8월 19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9월 중 인증대상이 선정된다.

인증받은 지자체와 서비스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동판이 부여되며, 공공부문 조달을 위한 혁신제품 선정 등 혜택도 검토하여 제공 예정이다.

행안부, 우수마을기업 16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9곳 선정

지역공동체과. 2022.06.09.



행정안전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우수 마을기업’ 16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마을기업 16곳에는 전국의 마을기업 중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문제 해결 등에 성과를 나타낸 기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우수 마을기업 143개를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우수 마을기업 16곳에게는 제품개발, 기반시설 확충, 홍보·판촉(마케팅) 비용 등으로 최대 7천만 원이 지원된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설립 된지 2년 이상 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기업 중 9곳이 선정됐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에게는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1억 원이 지원되어 마을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대비 우수마을기업은 2개, 모두애(愛) 마을기업 4개를 확대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인구감소지역) 우수마을기업 16개 중 5개 / 모두애(愛) 마을기업 9개 중 4개

행안부, 2022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

지역일자리경제과. 2022.06.12.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내외 지역으로,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 60억 원을 투입하고, 빅데이터·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골목상권의 변화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5억 원으로 다양화하고, 10개 내외 선정 지역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 부산(3), 대구(2),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6), 경남(11)

** 부산(2), 인천(1), 광주(1), 대전(3), 경기(2), 강원(4), 전북(1), 경북(2), 경남(2)

또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상인-임대인 간, 지자체-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한다.

* 사업신청 요건으로 골목상권 상인-임대인 간 임대료 동결 및 인하 등 상생협약 체결을 포함하고, 착한임대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제정 유도(가점부여)

김장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공동체가 협력하여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길 바라며, 성공적 사업모델이 마련되어 지역민에게는 자부심을, 어려운 지역경제에는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2022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59개 지자체 선정

지역사회혁신정책과. 2022.06.14.



행정안전부는 ‘2022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사업계획 중 90개를 선정하여 59개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총 28억 원의 국비와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엄선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해당 혁신사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3년 동안 72개 지역 혁신사례를 선정하여 201개 지자체에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고 93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특히, 2021년에는 광주 광산구의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토록 하여 응급상황에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대국민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의 “정보무늬(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 ▲부산 금정구의 “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 만들기” 등 총 34개 사례를 확산 대상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진단을 구성하여 선도 지자체의 경험 전수, 전문가 맞춤형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지역맞춤형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에 6개 지자체 최종 선정

지역디지털서비스과. 2022.06.15.



행정안전부는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 2021년에 5개 총 11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 바 있다.

* (19년) 청도, 완도 (20년) 인제, 서천, 하동, 고흥 (21년) 서귀포, 의정부, 김해, 성주, 광주 북구
행정안전부는 올해 디지털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공모(4.14.~5.13.)를 추진하고 최종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 지자체를 우선 선발하여,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디지털타운 조성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30억 원 규모의 특교세가 지원될 예정이며(지방비 30억 원 포함 총 60억 원 규모로 진행), 선정된 6개의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맞춤형 디지털타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으로 인구감소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보육의 공공성 높인 ‘서울형어린이집’ 100개소 추가 확대

보육담당관. 2022.06.07.

건축
정책

문화
관광

서울특별시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인 ‘서울형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지금의 약 2배인 800개소까지 늘리기로 한 가운데, 올해 100개소를 확대한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오세훈 시장이 공보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일정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년 선정, 시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담보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전역에 446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형어린이집’에 선정되면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영아반 80%, 유아반 30%)돼 인건비 부담없이 고호봉의 우수한 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가 운영비(평균보육료의 10%)와 환경개선비(4백~7백만원)를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다.

서울특별시는 2022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100개소를 오는 20일(월)~24일(금)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어린이집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평가 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국제스마트도시 평가 1년 만에 35단계 상승

경제일자리과. 2022.06.16.



부산광역시는 지난 5월 말 발표 된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SCI : Smart Centres Index)* 5회차 평가를 인용하며, 전 세계 주요 도시 76 곳 중 디지털 중심 스마트도시 2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 세계 주요 도시의 디지털 중심 스마트도시 경쟁력 순위로,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관인 Z/Yen (영국, 런던 소재)이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표 ▶134개의 스마트 관련 통계지표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분야별 전문가의 설문평가를 통해 순위 결정

작년 6월 발표한 3회차 SCI에 62위로 처음 평가순위에 이름을 올린 부산시는 작년 하반기 4회차에서는 21계단 상승한 41위, 이번에는 27위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작년 상반기 이후 불과 1년 만에 총 35계단을 수직으로 상승하는 등 같은 기간 76개 평가도시 중 가장 많이 순위를 끌어 올린 도시가 됐다.

* 부산 순위 변동: 62위('21년 상, 첫 진입) → 41위('21년 하, 21위) → 27위('22년 상, 14위)

부산광역시는 6대 정량평가 항목 중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의 핵심이 되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핀테크 등 첨단기술(technology) 분야 순위가 11위로 상위권인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로 향후 전체 순위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작년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순항 중이며, 이제 그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부산의 스마트·디지털 분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2030년까지 스마트도시 2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그린 뉴딜 사업 확대 추진

도시경제과. 2022.06.29.

건축
정책

도시
정책

환경

광주광역시는 그린뉴딜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에너지효율·제로에너지 및 녹색 건축물 등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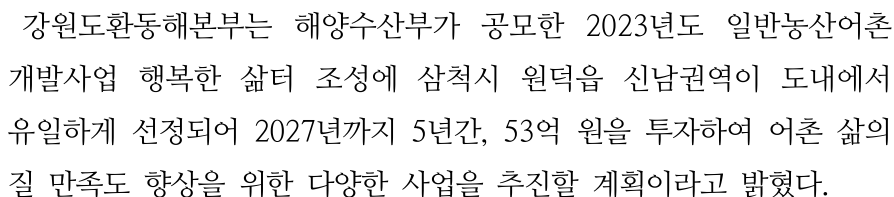
에너지효율·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고기밀, 고단열,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건축물을 지칭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건축물에 대해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또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프로그램 평가결과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그린뉴딜 정책을 적용한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후 기술사업화 과정을 아우른 역할을 하게 되며, 2023년 12월까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수산정책과, 2022.06.27.



이번에 선정된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어촌마을의 시급한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여 복지·문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삼척 신남권역을 포함하여 전국 9개소가 선정됐다.

삼척시 신남마을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증가, 마을 문화·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어촌마을이었으나, 금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삶이 편안한 복합문화마을 조성’을 목표로 신남항내 다목적센터 신축, 온실정원 조성, 회센터 정비 등으로 문화 복지시설 확충과 어촌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금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낙후된 어촌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향상과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사업계획도(삼척시 원덕읍 신남권역)]

전라남도, 전남형 청년마을 순천, 곡성, 영광, 완도 등 5개소 선정

인구청년정책관. 2022.06.16.



전라남도가 청년이 주도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를 추진하여, 대상지로 순천, 곡성, 영광, 완도 등 5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상생 모델을 개발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대상지에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해 청년 활동공간 조성 과 지역살이 체험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지역자 원을 재조명해 청년 창업·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6개 시군 10개 청년단체가 응모했으며, 1차 서면심사 후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5곳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남형 청년마을을 본격 추진한다.

선양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형 청년마을이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청년이 중심이 돼 지역주민과 상생모델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 선정 마을 주요 사업내용(안)]

선정 마을	주요 내용(안)
순천시 장천동	- 환경과 연계한 청년커뮤니티, 청년잡지 제작,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순천시 조곡동	- 지역을 알아가는 순천 두달살기, 수제맥주 제조 교육 등 청년창업 프로그램 지원
영광군 안터마을	- 치유농업과 연계해 국화, 구절초, 엉겅퀴 등 야생약초를 재배, 로컬푸드 상품을 개발 및 주민과 치유문화축제 개최
완도군 용암마을	- ‘빈집중매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청년이 머무는 주거 공간 확보,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로 수익 창출
곡성 겸면	- 청년이 빈집을 직접 수리해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봉사단, 마을관리사 등 마을 주민과 상생하는 프로젝트 추진

경상북도 영주시,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개장

사회재난과. 2022.06.23.

도시
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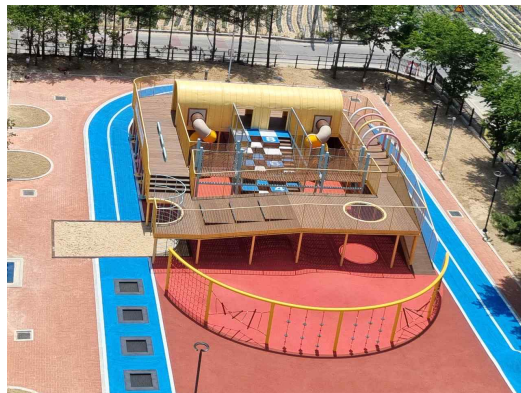
경상북도는 23일 영주 가흥동 주공3단지 아파트(가흥동 1486) 내에 ‘신기한 나라의 놀이터’를 조성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장옥현 영주시장, 정태영 세이브칠드런 총장, 김동기 경상북도 사회재난과장, 시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한 영주 ‘신기한 나라의 놀이터’는 지난해 경상북도 어린이 놀이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억원(도비 1.5억, 시비 8.17억, 기타 3300만)을 투입해 3단지 아파트 내 2090㎡의 규모로 조성됐다.

놀이터는 매달리기, 그물놀이, 미끄럼틀, 트램펄린, 놀이마당, 모래놀이 등의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놀이터는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명칭 선정, 감리 등 조성 전 과정에 놀이터의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가 참여했다.

또 지역주민, 어린이 대표, 전문가 자문단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설계에 반영했다.

내달 1일에 개장되는 ‘신기한 나라의 놀이터’는 영주 가흥동 일대의 어린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고 안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장소가 될 전망이다.



[영주시 신기한 나라의 놀이터 현장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본격 추진

문화정책과. 2022.06.02.

건축
정책

문화
관광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이후 본래 기능을 상실한 우도 담수화시설에 대한 문화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도 담수화시설은 1998년 12월 준공되어 상수 공급원으로 기능을 하였으나 우도 해저 상수도 사업 이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어 그동안 지역주민은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라왔다.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공모 선정을 통해 우도 담수화시설에 대한 문화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방안 연구가 이뤄졌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3억 1,000만 원(균특 11억 5,500만 원, 도비 1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비 3억 4,400만 원이 투자되고, 다음 달부터 주민협의체, 사업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도·내외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사례 조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이어 공간이 조성되기 전 담수화시설이 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 보존하는 아카이브 연구와 문화재생 공간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실험하는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도 진행한다.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문화재생 공간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4개소 본격 착수

도시디자인담당관. 2022.06.08.

도시
정책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계획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4개소에 대한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내 시설물과 공공공간에 총 5억 원을 투입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 이동약자의 접근이 힘들었던 아라2근린공원 북쪽사이트에서의 접근 및 이용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름철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방문하는 탐동1공원은 노후화된 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물을 개선하고, 3D시범사업*과 연계해 공원 전반의 환경을 개선한다.

* 3D시범사업: 유니버설디자인(UD), 공공디자인(PD), 셉테드(CPTED)이 연계한 공공공간 시설 개선사업
신산공원과 탐동광장은 산책로 보행 쉼터와 경사로를 추가 설치해 공원과 광장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2월부터 세부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지난 5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6월 착공해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재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민 및 방문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유니버설디자인이 도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개 모집

자치행정과. 2022.06.16.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분야)'에 참여할 마을을 오는 8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읍·면 단위는 리, 동 단위는 자연마을로 최근 5년 이내에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다. 단, 공모년도에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한 이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관 읍 지역 및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분야 사업의 유형은 ▲자율개발사업 ▲종합개발사업 ▲제주다움복원사업 총 3개다. 사업 내실을 기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합개발사업 및 제주다움복원사업에 중간 평가 절차를 이번에 신설했다.

중간 평가란, 1단계 사업 완료 후 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을당 지원 규모는 자율개발사업 5억 원, 종합개발사업 10억 원(1단계 5억 원), 제주다움복원사업 20억 원(1단계 10억 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2~5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율개발사업 4개 마을, 종합개발사업 4개 마을, 제주다움복원사업 2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제주 마을의 가치를 높여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특화사업을 계획하도록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니 각 마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건축·도시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과기부·국토부·산업부, 공동주택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 실시

네트워크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전자전기과. 2022.0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등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구축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를 실시(6.7~)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준공연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20개의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이하 ‘기술기준’」에 따른 필수설비 설치 여부와 장비·기기의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KC)인증 여부, 그리고 장비·기기의 보안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에 유추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관리사무소는 관리서버 등에 대한 사용자 인증 강화(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이중 인증 적용 등)와 보안 업데이트 등의 기본적인 보안수칙만 준수하더라도 상당 부분 해킹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홈네트워크 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 과학적인 폭염대응을 위한 전국 지자체 '열분포도' 제공

재난정보연구실. 2022.06.17.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2021년도 여름철(6월~9월) 기상 관측 정보를 분석하여 개발한 ‘열분포도’를 전국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열분포도’는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 전국의 지표온도*와 공간정보**를 융합·분석하여 30m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균기온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제공되었다.

* 미국 ‘랜드셋’ 위성영상에서 관측한 가로·세로 30m 해상도의 지표온도

** 수목·초목 등의 식생 분포도, 일사량, 지표의 고도/경사도/경사방향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는 ‘열분포도’를 활용하면 그늘막, 안개 분사기(쿨링 포그) 등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시 최적의 위치선정에 도움이 되는 등 지역별 맞춤형 폭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열이 집중된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무더위 쉼터, 재난 취약계층 현황 정보 등을 접목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폭염 대처 관련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공간 정책 추진 시 세부적인 ‘열분포도’가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에 제공하는 ‘열분포도’는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자치단체의 과학적 폭염 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다양한 연구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스마트 공유공간 시스템 지원사업’ 공개모집

자치행정과. 2022.06.10.



‘스마트 공유공간 시스템’은 공간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공간의 문을 열고 전등이나 에어컨 제어 등 원격으로 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구의 수많은 유휴공간이 관리인의 부재로 공유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 2019년부터 (사)대구시민재단과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협업해 개발했다.

2019년 ‘시지마을공유공간 톡톡’ 공간의 실험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스마트시티지원센터의 회의실과 비영리단체인 ‘공간위드’의 공간에 스마트 공유공간 시스템을 지원해 기존 이용자들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구에는 10개소(공간7549, 물배기마을, 새빛도서관, 소철살롱 해시태그, 교대역·동촌역·대공원역 댄스공간, 시지마을 공유공간 톡톡, 스마트시티지원센터, 대구청년유니온)의 스마트 공유공간이 조성돼 있다.

스마트 공유공간 예약은 공유대구 플랫폼(www.sharedg.org)에 있는 ‘스마트공간대관예약’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시간 동안 스마트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고 관리자 역시 예약관리 페이지에서 예약 현황 및 시스템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공유대구 플랫폼(www.sharedg.org)에서 사업신청서, 공간 및 단체소개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사)대구시민재단 공유사업팀에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대구시민재단 공유사업팀(053-214-0606)에 문의하면 된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

